

광주시장·전남지사 “尹 구속 당연...이젠 민생 회복의 시간”

강 시장, 내란 특검법 공포 민주주의 회복·슈퍼 추경으로 민생 살려야 김 지사, 무너진 서민경제·골목 상권 등 대책 시급...민생 추경 촉구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내란세력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평가하고, 정부에 ‘슈퍼 추경’ 등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강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대통령 구속은 내란 세력에 대한 사법부의 철폐”라면서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국민의 명령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각각 ‘2차 내란 특검법’을 공포해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신속한 ‘슈퍼 추경

(추가경정예산)’으로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이날 정부, 여·야 정치권에 하루 속히 민생 추경부터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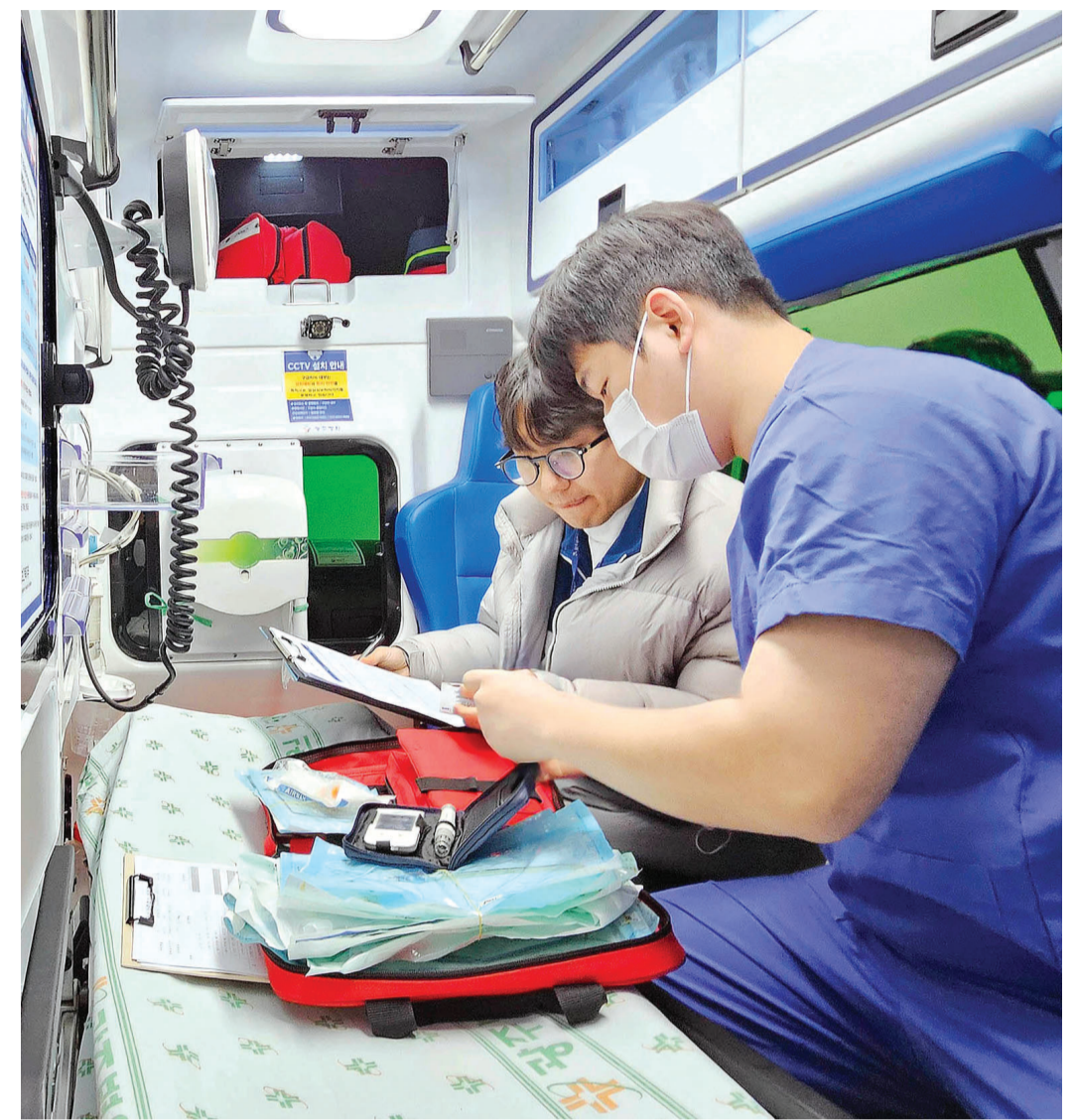
무너진 서민경제, 골목상권부터 중대기업까지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난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하고, 여·야 정치권 모두 이 문제에 매몰되면 서 환율 급등, 주가 폭락, 소비 침체 등 민생 문제가

가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새벽 현재 대통령 최초로 윤석열이 구속됐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면서 “국민을 배반한 내란 수괴의 결말은 준엄한 법적 처벌과 헌법적 파면뿐임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제 더 늦기 전에 무너진 민생경제에 집중해 쟁겨야 한다”며 “정부, 정치권 여야 모두 하루라도 빨리 민생 추경부터 시작해야 한다. 무너진 서민경제 골목 상권부터 중대기업까지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구급차 관리실태 점검 광주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지난 17일 북구 우산동 종합병원에서 열 명절을 앞두고 긴급 출동 의료 장비 구축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

광주시, 정부에 AI 2단계 예타면제 등 지역 현안 해결 건의

최상목 권한대행 전일빌딩245 방문 강 시장 ‘1229 마음센터’ 지원 요청도

강기정 광주시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 예타면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1229 마음센터(가칭)’ 조성 지원 등 지역 내 주요 현안 해결을 건의하고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8일 광주 전일빌딩 245에 마련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은 최 권한대행과 만나 ‘1229 마음센터’ 지원과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1229 마음센터’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사회 재난 피해자들의 자조공간이다.

최상목 권한대행 등 정부대표단은 이날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에 참석한 뒤 희생자가 가장 많은 광주를 방문하고,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광주시에서는 강 시장을 비롯한 고광완 행

정부시장, 심·국장 등이 함께 했다.

최 권한대행 등 정부대표단은 합동분향소 참배에 이어 ‘1229 마음센터’ 임시 예정지인 전일빌딩 245를 둘러보고, 광주시가 구상 중인 ‘1229 마음센터’ 조성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강기정 시장은 유가족 협의를 전제로 1·2단계로 나눠 마음센터를 추진하겠다고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우선 전일빌딩 4층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대시민 치유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1229 마음센터를 건립해 종합적인 재난 심리 지원을 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이날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으로 해부지 등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최 권한대행은 “광주시가 (유가족 심리 치유·일상회복 등에) 선제적으로 나서줘 고맙다”고 화답했다.

강 시장은 앞서 지난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시도지사 임원단과 최 권한대행과의 간담회에도 참석해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

추경 편성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강 시장은 특히 광주의 미래가 걸린 미래차국가산단 국가전략사업 신속 선정과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AI실증밸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건의했다.

협의회 감사를 받고 있는 강 시장은 “지방의 산업은 중단되어서는 안 되고, 특히 미래산업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미래산업 관련 대표 이슈로 AI 2단계 사업과 국가산단 국가전략사업 선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 미래차국가산단을 비롯한 전국 4개 시도가 국가산단 국가전략사업 선정을 정부에 신청한 상태”라면서 “정부는 선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산단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문제 등을 빠르게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 밖에도 상생카드 국비 지원 확대 등 소비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 추경 편성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국회도서관 분관 최적지 ‘광주’

한국도서관협회 연구 용역 결과 지역 불균형 해소 위해 설치 필요

광주가 국회도서관 분관을 짓는 데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최적지’라는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했다.

19일 한국도서관협회(협회)가 국회도서관으로부터 의뢰받고 진행한 ‘국가 지식정보체계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도서관의 역할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에 국회도서관 분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협회는 “국회도서관의 분관 설치 목적이 국가가 수집한 지식정보의 확산과 지역 간 도서관과 지식

문화의 균형발전에 있다”면서 “국립도서관인 국회도서관의 분관 설치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광주시가 최적지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협회는 특히 “국회도서관 광주 분관은 전통적인 지식 정보의 수집과 이용 서비스를 넘어 지식 정보를 생산·유통하며 복합문화기관으로서 한국형 국회 GLAM(미술관·도서관·기록관·박물관)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2023년 기준 호남권역(광주·전남·전북)에는 광주 30관, 전남 74관, 전북 66관 등 총 170개관의 공공도서관이 있어 지역주민의 독서·교육·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전국 공공도서관 1271개관 중 약 13.3%에 해당된다”며 “국

회도서관 분관이 호남권역에 입지하게 되는 경우 국립도서관이자 공공도서관으로서 인근 지역의 공공도서관 간 수도권에 밀집된 정보자원을 공유·교류할 수 있도록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광주에 국회도서관 분관이 생긴다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 지식 정보와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메카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회도서관 광주 분관 규모를 2022년 개관한 국회부산도서관과 비슷한 규모인 1만4000㎡로 판단했으며,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938억5868만원으로 산정했다.

앞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10월 광주에 국회도서관 분관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한 토론회를 열면서 ‘광주 국회도서관’ 설립을 촉구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전남도, ‘선선(善-先)결제’로 소상공인 지원

공공·금융기관 등 동참...경기회복·소상공인 경영안정화 기대

전남도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군, 공공기관,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주체와 함께 ‘선선(善-先)결제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고물가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폐업 위기에 몰려 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와 사·군은 예산을 신속하게 조기 집행해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민간기업, 금융기업 등과 함께 인근 식당, 점포 등에서 선결제를 해주는 것이다. 별도의 추가 예산 투입 없이 지역 경기 회복과 경제적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2024년 3분기 전남지역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 줄고, 전 분기보다 4.2% 감소한 상태에서, 이번 공공과 민간이 협력

하는 선선결제 캠페인은 경기 회복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산하 100여 개 공공기관과 나주혁신도시 16개 이전 공공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농협 전남본부, 광주은행을 비롯한 금융권과 도내 대·중소기업 캠페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선선결제 캠페인은 단순한 선결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고 상생 문화를 확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과 공공기관, 민간이 하나 돼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1월 말부터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캠페인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광주문화신탁이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